

북한의 산업구조 : 형성원인을 중심으로*

李 道 星

목 차

- | | |
|--------------------|--------------------|
| 1. 서론 | 2. 북한의 산업구조의 현황 |
| 3.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 4. 자력갱생원칙과 중공업육성 |
| 5. 북한의 군사비지출 | 6. 무역에 대한 태도와 폐쇄경제 |
| 7. 서비스와 경공업부문의 부진 | 8. 경제의식의 문제 |
| 9. 계획당국의 자원배분 결정모형 | 10. 결론 |

1. 서론

북한경제에 관한 연구는 연하청[86]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북한경제 전반에 관한 연구로는 최근의 황의각[92]을 들 수 있으며 북한의 산업구조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태욱[88, 90], 정갑영[90], 추재호[90] 등을 들 수 있으며 북한경제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정갑영[91], 김수용[91] 등을 들 수 있다. 산업구조와 관련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특징은 공업의 비중이 크며 공업 중에서도 重工業 및 국방과 관련된 군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경공업과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진 북한의 경제운용에 대한 기존연구의 평가는 60년대 까지의 성과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70년대와

* 이 연구는 1991년도 教育部 社會主義圈 研究 支援金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80년대를 통한 성과는 점점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북한의 중공업중심의 산업구조가 일차적으로 북한의 정치 경제의 기본정책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른 對內指向의 경제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당면한 오늘날의 경제적 곤경도 대체로 이러한 경제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고의 관심은 기존연구들이 지적하는 북한산업구조의 특징이 형성되게 된 원인과 과정에 있다. 따라서 북한이 주체사상이나 자력갱생 또는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을 택하게 된 상황과 원인에 대해 경제적 측면 및 이와 관련된 측면의 조사 및 분석을 시도한다. 북한의 경제는 순수한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우선의 수단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구조의 형성원인을 규명하려면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 국방분야 등의 관련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산업구조가 북한과 기본적인 특성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산업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준 마르크스-레닌의 敎理的인 요인들과 북한 고유의 요인들이 가급적 분리되어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북한의 산업구조의 현황과 구조상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3절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형성배경과 이것이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중공업편중의 원인을 살펴보고, 5절에서는 국방비의 지출문제를 살펴본다. 6절에서는 무역활동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고 7절에서는 서비스부문 및 경공업분야의 부진에 대해 살펴본다. 8절에서는 북한의 정책당국의 의사결정 상황을 묘사하는 계획당국중심의 국방부문과 소비부문 간의 자원배분 결정모형을 소개하며 이 모형을 통해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계획당국의 행동의 변화 및 이들의 행동의 변화로 미루어본 여건 추정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2. 북한의 산업구조의 현황

산업구조는 경제의 人的, 物的 부존자원을 생산활동에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長期的인 변수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산업구조가 계층에 의해 형성 유지되었지만 현재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비자, 기업, 정부, 해외 부문등의 각주체들의 선택이 시장을 통해 集計됨으로써 결정되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주로 계획당국의 장기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주의 체제를 추종하여온 북한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산업구조를 갖게 된 원인이나 북한의 경제여건의 변화가 이들의 산업구조에 반영되는 방법이 남한의 시장경제제도에서의 상황과 현저히 다른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黨 중심의 중앙집권적 경제운영을 계속해왔으므로 북한의 산업구조는 계획당국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획당국의 문제는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종 정치적 고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구조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 상황뿐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측면까지를 계획당국의 장기적 구상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연구들을 통해서 관찰하는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에 편중되어 있고 소비재등의 경공업에 취약한 불균형적 구조이다. 북한이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을 좀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구조가 남북한의 경제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지난 30년간의 남북한의 산업구조의 추이를 비교한 다음 자료를 보면 북한의 산업구조는 대체로 광공업중심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구조는 농업으로부터 광공업 서비스로 큰 폭으로 이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이러한 추이는 대체로 무역을 통한 비교우위가 농업보다는 제조업에 있었으며 또한 경제가 성장하여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부문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수요구조의 변화가 서비스부문

을 팽창시켰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공업부문이 계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업의 비중도 감소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비중도 증가하지 않는 공업위주의 정체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부문/연도별	60년		70년		90년	
	남	북	남	북	남	북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47.5	29.8	51.1	21.2	61.5	30.4
광공업	15.7	41.3	22.4	57.3	29.5	42.8
농림수산업	36.8	28.9	26.5	21.5	9.0	26.8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 p.55에서 재인용)

대체로 공업부문이 비대하고 서비스부문이 비중이 낮은 이러한 산업구조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또한 북한의 공업생산구조를 사회총생산의 산업별 구성으로 나타낸 다음 표에서 북한의 공업생산구조의 추이를 보면 기계제작 및 금속가공분야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공업분야와의 불균형이 오늘날 북한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49	56	60	65	70	75	80
전력	1.6	.7	.3	.3	.3	.4	.7
연료공업	5.1	1.8	1.3	1.1	1.02	—	1.5
채굴공업	8.1	6.1	4.0	2.8	—	—	8.0
금속공업	11.0	8.6	6.8	9.8	10.5	—	12.0
기계제작, 금속가공	8.1	17.8	21.3	29.0	—	31.4	33.7
화학공업	9.5	4.7	5.4	7.2	8.0	9.0	9.5
건재공업	2.5	5.8	5.9	6.3	—	7.0	9.5
임업 및 목재공업	6.4	6.1	2.9	—	—	—	1.0
셀룰로우스 종이	2.2	2.5	2.6	—	—	—	1.0
섬유공업	11.4	18.4	16.8	16.8	16.0	18.0	15.0
식료제품제조공업	19.4	13.2	14.4	10.4	13.0	—	10.0
기타부문	15.3	14.6	16.6	—	—	—	6.4

자료 : 소련과학 아카데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p.57에서 재인용)

북한의 노동인구분포에 관한 다음 자료를 보면 87년 현재 成人인구의 25%는 농민, 58%는 2차산업 및 공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고 17%는 3차산업 또는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사무노동자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인구는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 상당한 규모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3차 또는 서비스부문의 인구비중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人力面에서 공업화의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	1963	1986	1987
국영기업노동자	38.3	40.1	56.3	57.0
공무원 및 사무원	13.7	15.1	17.0	16.8
농민	44.4	42.8	25.9	25.3
협동기업노동자	3.3	1.9	0.9	0.9

자료 : 조선중앙연감, (『북한』 p.28에서 재인용)

3.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북한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고 사회주의경제의 의사결정은 정치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이 추종하는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조차도 정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의 정치 및 경제를 지배해온 지도 개념인 주체사상이 등장하게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북한의 산업구조와 관련된 주요 결정들을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정책당국은 집권초기부터 중공업중심의 공업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경제운동도 스탈린식의 강력한 중앙통제의 방법을 통해 추진하여왔다. 이러한 북한 계획당국의 의도 및 행동방식과는 달리 소련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분업에서 소련이 북한에 요구하는 역할은 1次產品이나 경공업제품의 생산과 수출이었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스탈린식의 강력한 중앙통제보다는 신축적인 온건노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해와 이념의 대립이 중-소 분쟁이라는 국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북한으로 하여금 중립, 자주노선을 택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른 사회주의진영의 경제적인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自力更生이라는 對內指向의 개발방법을 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북한을 둘러싼 일련

의 환경변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정을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최초로 주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55년 12월 28일 김일성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문에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맹목적인 사대주의 경향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²⁾ 주체사상은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의 생존과 국익증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것으로 이해된다. 다양한 外的 요인들 중에서 특히 중-소 논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주체적 입장을 주장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공하였다.³⁾ 그 이후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정책의 지도 원리로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분화되어 발전된다. 경제에서의 자립 문제는 1956년 12월 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김일성은 자립 경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이 없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며, 자립적인 경제력없이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을 관철할 수 없다.⁴⁾

북한당국이 이 시기에 주장하고 있는 경제에서의 자립이란 무엇보다도 원조와 이에 따른 내정간섭으로부터의 자립을 강하게 의미하는 것으

2) 전인영,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과 이론 세계”, 『북한의 정치』, 전인영 편집, (서울 : 을유문화사, 1990), pp. 65-101.

3) 앞의 책, p.77.

4)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동경),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북한의 정치』 p.113에서 재인용.

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하는 80년대의 연설문에서 자립의 개념은 자급자족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내적인 노력증강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 경제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당의 사회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건설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나라의 자연 부원을 충분히 개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 경제의 부문 구조를 완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 경제를 주체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⁵⁾

이상에서 보면 자주노선은 중-소 관계 사이에 있는 북한의 실용적 입장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체사상이라는 정치이념이 전개되며 이에 대응하는 국내노선으로 다음 절에 소개되는 '자립적 민족경제' 또는 '자력갱생'론이 등장하게 되어 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북한의 경제를 이끌어오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트리구벤코[91]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형성되기까지는 소련의 영향이 컸음을 강조하고 있다. 트리구벤코는 북한의 경제정책의 분석에는 주체사상에 의한 일방적인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며 소련의 북한에 대한 역할 配定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과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군수산업 기지의 시설과 자원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남북한의 대립관계에 있었다

5)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전망", 통일문제연구소, 『북한경제자료집』 (서울: 민족통일, 1989), p.232에서 재인용.

는 점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건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이 밟아온 경제적 선택을 파악하는 데에 유익한 제언이라고 생각되며 본고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북한의 계획당국의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4. 자력갱생원칙과 중공업육성

사회주의 국가의 산업구조에 보편적인 현상 중의 하나는 산업구조에서 광공업,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공산권 경제는 대체로 농업 위주의 후진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므로 공산권 경제에서는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과업이 절실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자본축적론의 기초를 이루는 확대再生産모형에 입각한. 성장이론이 도입된다. 마르크스의 자본축적론은 생산재부분과 소비재부분의 2부분 성장모형이며 이러한 축적모형을 사용한 근본 취지는 이윤율의 저하, 침체, 실업, 임금하락, 경기회복과 같은 주기적 공황의 구조를 주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이 모형을 생산재부분과 소비재부분 간의 선택을 고려하는 기본모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전형적인 공업화과정은 경공업과 소비재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다음 중공업부문으로 발전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경제적 방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려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북한도 대체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은 자주노선의 채택에 이어 자력갱생이라는 對內的 원칙을 천명하게 된다. 이 원칙이 선언된 것은 64년의 '평양선언'을 통해서이며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제일보에 불과하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민족해방혁명의

완수를 위한 하나의 연속적인 혁명적 과제이다. 자립경제의 건설은 이들 나라가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를 파행적인 식민지 경제의 낡은 틀내에 머무르게 하여 독립국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의 길을 막는 것이다.⁶⁾

이 선언은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반대를 예견하고 있다. 이 선언 역시 對內的이기는 하지만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 경제노선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평양선언’에 대한 소련은 “자력갱생의 원칙은 옳지만, 그것은 이 원칙이 해방을 쟁취한 국가와 사회주의 제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과제와 대립되지 않는 한에서 그러하다”는 논평으로 반응을 보였다.⁷⁾

高瀬淨[88]은 이러한 자력갱생전략이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자력갱생은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5.5억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원조로 전쟁의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시점에서 북한에게 요구된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국제분업 임무에 대한 반발과 그 밖에도 對美觀의 변화, 통일정책의 포기, 우상화의 포기, 시장기구의 적극적 인정 등과 같은 소련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북한은 소련을 주정주의라고 비난하고 이의 수용을 거부했고 그 결과 소련 및 동구권으로부터의 원조가 대폭 삭감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이 선택한 ‘자력갱생’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불균등 발전론’으로서 이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도 그 발전 단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취할 수 없으며, 각국

6) 고뢰정, 『북한 경제입문』 이남현 역 (서울: 청년사, 1988), p.200에서 재인용.

7) 앞의 책, p.200.

8) 앞의 책, p.17.

은 자국의 역사적 단계와 현실적 조건에 맞는 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 시기에 북한이 독자적인 산업구조를 원하였던 경제적인 이유는 일제의 畸形的 공업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와 소련중심의 국제분업에 대한 불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북한이 일제 때의 기형적 공업구조에서 탈피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립적인 공업화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김일성의 다음 연설문에 나타나 있다.

일제 때의 우리 나라 공업은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일제자본의 독점적지배로 말미암아 민족공업의 발전은 극도로 억제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수공업마저 다 파산 되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다만 조선의 자원을 약탈하며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원료와 반제품을 생산하는 약간의 공업을 건설하였을 뿐이다. 가공공업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특히 기계제작공업은 거의 없었다. 공업의 기술장비는 매우 뒤떨어져 있었다. 우리가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이와 같은 식민지공업이었으며 그것조차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김없이 마사졌다.¹⁰⁾

같은 연설문에서 중공업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중공업은 인민경제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없다. 특히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로서 그것 없이는 자립적 민족경제란 말할

9) 앞의 책, pp.17-18.

1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북한경제자료집』, pp.174-75에서 재인용.

수 없고 강화할 수 없다.

이 주장에서 보면 중공업이 산업구조에서 갖는 기능적 역할이 강조되었을 뿐 이 부분의 경제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중공업에 기대하는 국방력의 증강도 적지 않았음을 이 연설문은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에서 소련이 요구하는 북한의 역할에 대한 불만은 연설문의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국제분업〉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우리 당의 중공업건설방침을 반대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고 광석과 그밖의 다른 원료나 생산하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의견에 따라갈 수 없었다. 우리 당은 이미 전쟁시기부터 지하에 기계공장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전후에 기계공업을 빨리 늘였다.

북한의 공업화욕구에 반해 소련이 북한에게 기대한 역할은 원료공급 내지 경공업수준의 공업화이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소련의 간섭에 반발하고 자력갱생이라는 경제원칙을 내세우는 계기가 된다.¹¹⁾ 90년대의 동구의 상황에 대한 허만[91]의 주장도 60년대에 북한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에 의하면 동구는 40여년간 경제적으로 코메콘 경제권에 편입돼 일방적 국제분업을 강요받음으로써 低成長을 체험했고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 군사권에 편입되어 독자적 군사정책의 수립을 박탈당하여 왔고 외교적으로는 유고, 루마니아 및 알바니아를 제외하고는 자주노선의 제약을 심각하게 받아 왔으며 이러한 통제와 제약이 동구제국으로 하여금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게 하였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이 선택한 자주노선,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원

11)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71-72.

칙은 소련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되던 상황 하에서 동구제국에 무려 30년을 앞선 판단이었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오늘날의 동구가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스탈린식의 복고적 운용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북한의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주체 및 자력갱생의 노선이 소련중심의 국제분업보다는 체제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었겠지만 그 대가로 북한의 경제적 개혁을 상당한 기간 지연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제와 소련의 대 북한 정책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김갑철[90]의 연구도 트리구벤코의 소련의 역할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갑철의 논문에 의하면 소련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일제하에서와 같은 불균형적 산업구조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對蘇 수출의 주종을 이루었던 광공업과 중공업 분야에만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방직 공업과 소비재 산업들은 미개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소련과 북한의 대외무역이 극비리에 행해졌다는 점과, 소-북한 합작회사에 대한 소련의 기여도가 낮았다는 점, 그리고 소련이 북한의 대외무역을 통제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소련이 북한과의 무역에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¹²⁾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혐오하는 제국주의국가의 하나인 일본과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사한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가 북한의 집권층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이념의 진지성에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북한당국이 선택한 것은 주체사상이나 자력갱생과 같은 정치적인 이념강화의 길이었다.

12) 김갑철, “북한에서 ‘인민정권’ 수립과정”, 『북한의 정치』 전인영 편집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60.

5. 북한의 군사비지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북한이 군수산업중심의 중공업을 폐쇄적으로 추진한 것을 북한의 오늘날 겪고 있는 경제난의 큰 원인으로 지적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자주노선을 천명한 북한은 정치적으로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수산업과 연관된 중공업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투자의 성과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연구들은 중공업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협소한 국내시장에 비한 과다 투자 및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의 연계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기존연구들이 지적하는 이러한 중공업위주의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본고에서는 군수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해외부문에서의 활동부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본절에서는 국방비 과다지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해외부문활동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남북한의 국방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에서 북한의 국방비는 67-71의 기간중 유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30%를 상회하며 이 기간은 남한으로서는 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북한의 국방비는 이 기간을 절정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남한은 이 기간을 최저점으로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은 북한의 제1차 7개년 계획(61-67)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실제로 7개년 계획은 도중 3년을 연장하여 개편되어 정치, 군사우선의 경제건설체제로 이행되었다. 북한당국의 공식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국방비증대의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것이다. 60년대에 들어서 중-소 대립의 격화, 쿠바사태, 베트남전쟁, 한일협약,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남북한의 예산에서 국방비의 비율(%)

연도	북한	남한	연도	북한	남한
57	6.1	44.1	75	16.4	27.1
58	4.9	32.3	76	16.8	31.4
59	3.8	35.8	77	15.6	31.7
60	3.1	34.1	78	15.9	32.6
61	2.5	29.2	79	14.5	26.7
65	8.0	30.6	80	14.6	30.6
67	30.4	25.5	81	14.8	28.0
68	32.3	23.4	82	14.6	27.3
69	31.0	21.4	83	14.7	27.9
70	31.0	23.6	84	14.6	26.6
71	31.1	25.2	85	14.4	26.6
72	17.0	27.0	86	14.1	27.5
73	15.4	28.8	87	13.2	27.0
74	16.1	27.6	88	12.2	27.1

자료 : 북한측자료 〈증양연감〉 (황의각, 『북한경제학』 pp.174-6에서 재인용)
 남한측자료(같은 책 pp.185-6에서 재인용)

크게 변화를 보였다.¹³⁾ 그후 북한은 자주독립노선을 정착시켜나가며 그 결과 66년의 노동당 대표자회의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등을 위해 7개년 계획을 3년연장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을 국시로 결정하며 또한 국방비를 국가예산의 30% 이상으로 급격히 높게 책정하게되며 이에 따라 국방비 부담이 경제건설을 크게 압박하게 되었

13) 앞의 책, p.251.

다.¹⁴⁾ 67년에서 71년까지의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국방비지출은 이 기간 이후의 연평균 15%의 두 배의 규모에 이른다. 북한의 예산이 대체로 국민총생산의 1/2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출이 북한의 경제에 준 부담은 막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70년의 로동당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국방비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 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 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 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의 인민경제는 보다 빨리 발전하였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세는 이렇게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안락을 위하여 혁명의 근본리익을 저버릴 수 없었으며 다시는 망국노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¹⁵⁾

이 보고서에서 먼저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국방의 대가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방비지출은 국방에 소요된 경제적비용으로서 국방비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국방에 종사하는 인원, 시설의 기회비용을 계산한다면 국방의 경제적비용은 국방비지출을 상당히 상회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인 국방비용과 국방비지출간의 차이는 국방에 대한 제도적지원이 클수록 커진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군비를 통한 군사력의 경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국방예산 이상의

14) 앞의 책, p.251.

15)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서”, 『김일성저작선집』 p.479, 이규별,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1991): p. 137에서 재인용.

큰 부담을 주지만 경제규모가 작은 북한이 훨씬 큰 상대적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력우위를 유지하려고 장기간 노력한데에는 북한 집권층의 對南인식과 상황판단이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보고서에서 이런점과 관련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러한 막대한 지출을 합리화시키는 명분이 이른바 혁명의 근본이익의 수호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북한의 방위를 뜻하는지 무력통일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전반적인 정세의 판단에 있어서 매우 값비싼 착오를 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 집권층의 대남인식에는 남한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이들의 남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이규열(91)은 6.25 당시 전쟁중이었던 50년 12월에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전쟁진행경과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비판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에 대한 정치공작의 부족을 지적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에 남한의 정치정세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인식을 가지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¹⁶⁾ 북한의 60년대 후반의 집중적인 군사력증강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생각된다.

북한의 국방에 대한 노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국제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통일관과 남한에 대한 평가에 직결된다. 북한당국이 남한에 대해 가져온 태도에 대한 분석에서 이규열은 북한의 대남인식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묘사한다. 북한의 대남인식은 분단 직후의 공격일변도의 형태에서 전쟁직후 방어적 성격으로 변화되었으며, 60년대에는 무력통일과 내부교란에 의한 체제전복모두를 실질적인 가능성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력통일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나

16)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총람』 (1988) p.1635, 이규열,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1991) p.130에서 재인용.

공격성은 남아있으며, 80년대로 들어오면서 대남인식은 공격적 성격에서부터 경쟁적인 자세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말 이후 이 인식은 방어적 성격으로까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인식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최근 소련을 위시한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등의 사회주의의 부진한 실적들의 露呈과 다른 편으로는 남한의 정국이 보여준 오랜 기간동안의 불안정한 현실이 북한의 집권층의 대남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지만 아직 북한당국이 건설적인 대남인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북한의 경제적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兩大 요인으로서는 북한집권층이 마르크스적인 경제관에서 벗어나 얼마나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와 막대한 인적 물적자원의 무한정한 낭비를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대남인식에서 벗어나 얼마나 생산적인 대남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들 수 있다.

6. 무역에 대한 태도와 폐쇄경제

마르크스 경제학은 노동계급이 착취되는 정도를 부각시키기 편리한 형태의 모형을 취했지만 그 대가로 교환과 특히 무역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극히 부적절한 모형이 되었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를 그 재화의 생산에 소요된 사회적 필요노동으로 정의하므로 기본적으로 객관적 가치의 관점을 택하고 있으며 이 가치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합으로 표시된다. 이 중에서 현재의 노동은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합이며 노동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가변자본이다. 이러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동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노동만이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목적은 노동을 고용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하여 이것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교환과 같은 생산이외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인 것으로 본다.

먼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무역에 주는 교리적 유산을 살펴보기로 하자. 마르크스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일어나는 이윤율저하현상에 대한 이들 국가의 탈출구의 하나로서 국제무역을 들고 있다.¹⁷⁾ 따라서 국제무역이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이윤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편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국주의적 경쟁도 결국은 전쟁을 통한 세계적인 파국으로 이르게 한다는 레닌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의 붕괴논리로까지 발전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법칙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자급자족경제의 건설과 貿易無用論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산업구조를 기형화하고 저개발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고 우려하여 오늘날 까지 무역에 대한 경계심과 소극적 태도를 갖게된 데에는 이러한 교리적 영향이 적지않게 작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무역에 대한 이해가 식민지나 제국주의 시대의 수탈수단으로서의 관점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의식 하에서 무역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역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갑이 구두를 만드는 데 10시간이 걸리고 옷을 만드는 데 7시간이 걸리고 을은 구두를 만드는 데에 5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이 옷을 만들어 을이 만든 구두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이 교환을 통해서 갑은 직접 구두를 만드는 것보다는 옷을 만들어 구두와 교환함으로써 3시간에 해당하는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 현대경제학의 관점이지만 마르크스경제학의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이러한 교환은 7시간의 노동과 5시간의 노동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을이 이 교환을 통해서 2시간의 갑의 노동을 착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⁸⁾ 이와 같은 마르크스적 관

17) Karl Marx, *Capital* vol. III, (London : Lawrence and Wishart) p.238.

18) 앞의 책, p.238.

점에서는 공정한 교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무역활동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주로 후발 농업국에서 시작한 이들 사회주의국가들이 급속하게 자급자족지향의 공업화와 현대화를 이루는 데에는 생산재와 기술의 수입이 필요하였으므로 산업화와 자급자족화를 신속하게 이루는 방편으로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역의 국가독점이 이루어졌고 무역도 이러한 공업화의 보조수단으로 운용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사회주의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공업의 비중이 큰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산업구조를 갖는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도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지만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북한은 그들의 〈경제사전〉에서 국제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교역은 부등가교환과 이윤극대를 통해 상호 착취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교역과는 구별된다. 사회주의의 대외교역은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의 경제개발을 증진시키는 물론, 자주적인 국가경제의 건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북한을 특히 폐쇄적인 국가로 만든 이유로서 북한은 무역을 자급자족경제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인식하고 경제계획의 차질로 인한 부족물자의 도입, 부족한 기술의 도입수단으로 이해하고 수출은 수입을 위한 외화의 확보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국민총생산의 20% 정도에 해당하며 대체로 공업원료를 수출하고 자본재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으며 교역 대상국은 주로 공산권에 의존하고 있으나 점차 그 비중은 줄고 있다.

(단위 \$ 억)

	84	85	86	87	88	89	90
수출	11.1	11.3	13.1	14.7	18.2	16.7	18.6
수입	12.9	17.2	20.3	25.7	32.0	29.0	29.2

자료 : IMF,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p.4에서 재인용)

이들의 무역에 대한 인식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敎理的 소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50년대 후반부터 겪은 소련위주의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분업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동안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일 예로서 <로동신문> 64년 9월7일자 사설에서 북한은 戰後 경제복구기간(1954-1956)에 원조와 관련된 소련의 경제적 착취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쁘라우다가 원조의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는 평양방직공장과 홍남비료공장의 일부직장들의 복구 건설에 준원조에서 소련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설비와 강판을 비롯한 자재를 주고, 그 대신 우리에게서 수신통의 금과 다량의 고귀한 비금속과 원료를 국제시장보다 훨씬 헐한 값으로 가져갔다.”¹⁹⁾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분업이라는 소련 중심의 무역구조에 대한 북한의 체험의 한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며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국제시장가격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주노선을 주장한 이후 차관을 유치하여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油價波動에 뒤이은 국제불황으로 인한 북한의 수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債務不履行을 선언한 75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참여가 봉쇄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무역관은 교리적인 영향과 소련과의 무역경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19) 김갑철, 앞의 글, p.61에서 재인용.

귀절은 무역에 관한 소극적인 북한의 종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인민 경제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민 경제의 부문 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서는 수입 원료의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을 자체의 원료와 쓰는 공업으로 점차 개편하여야 합니다.²⁰⁾

그러나 최근에는 무역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국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은 대외무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강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외 무역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인민 경제의 규모가 비할 바 없이 커져 경제 부문들이 매우 다양해진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외 무역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외 무역을 빨리 발전시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물건들을 대외 시장에 적극 내보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제때에 들여와야 합니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 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수출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며 신용제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을 널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며, 수출품의 질을 결

20) 김일성,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북한경제자료집』 p.233에서 재인용.

정적으로 높이고 납입 기일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²¹⁾

이것은 경제사전에 실린 무역에 대한 정의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인식이지만 무역의 경제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수입을 위한 수출이나 사회주의국가간의 유무상통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마르크스주의적인 무역의식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7. 서비스와 경공업부문의 부진

서비스 및 경공업 부문이 부진하고 중공업부문이 불균형적으로 비중이 큰 것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가치는 생산적 노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따라 물질생산에 투입된 노동만을 생산으로 간주하며 서비스활동을 비생산적으로 보기 때문에 서비스부문은 자연히 부진할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상업, 금융, 국가행정, 교육, 과학, 문화 등과 같은 분야는 비생산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상업분야에 있어서도 생산품을 최종수요자 또는 중간수요자에게 배달하는 활동만은 생산과정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생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서비스부문이 발전하는 속도와 비교하면 이들이 비생산적부문으로 등한시한 이 분야는 세계수준에 비해 가장 낙후된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또다른 낙후분야인 경공업분야의 문제는 대체로 중공업중심의 경제운영에 따른 상대적인 현상으로 야기되었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오랜기간을 두고도 이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5년에 발표된 다음 글에서 당시의 북한의 경공업의 현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21) 앞의 책, p.239.

우리의 소비품은 아직도 질이 높지 못하고 그 품종도 요구되는 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쓰는 모든 소비품이 자기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매우 즐겨 쓰고 있다. 우리는 소비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며 품종을 더욱 다양하게 하는 문제를 가까운 시일안에 풀 것이다.²²⁾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경공업의 문제는 윗글에서 지적한 상황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시점에도 경공업의 부진은 북한의 경제의 당면 문제로 남아 있다. 북한의 집권당국이 경공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오랜 기간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는 불균형적 산업구조와 인력구조의 문제가 경공업건설에 의외로 큰 장애요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추세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 유통, 과학, 문화, 의료, 오락 등과 같은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제조업의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과를 볼 때에 기초과학과 체육 예술 등의 몇몇 분야는 국가관리와 통제의 방식으로 세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유통, 기술, 정보 등의 서비스분야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속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대중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다. 북한은 기술혁명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일을 쉽게 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이른바 공정혁신단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수월하게 하려는 정도의 동기가 기술혁신의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와 더욱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투자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국제경쟁 상황하의 기술혁신

2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북한경제자료집』 p.177에서 재인용.

을 수행할 수 있는가가 의문스럽다. 또한 북한의 산업은 자체의 전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주도하에 있었고 1946년 이후에는 소련의 모델인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였다.²³⁾ 이와 같이 자본가, 기업가, 경영인의 인적자원이 역사적으로 빈곤한데에다 그 간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우선정책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기술, 자본 뿐 아니라 이러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의 부족문제도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8. 경제의식의 문제

지금까지의 본고의 내용에서는 북한의 산업구조의 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정책담당자들의 利害, 選好, 및 의식에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집권계층의 이해와 선호가 자원배분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다음 절에 소개되는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본절에서는 정책당국의 경제의식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살펴 보기로 한다. 여기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경제의식은 개인의 동기, 가격제도, 시장기능 등에 대한 이들의 이해와 시각이다. 먼저 69년에 발표한 김일성의 글을 보면 개인의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기 때문에 생산발전과 기술발전에 아무런 한

23) 샤이베,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1991) p.273.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노동의 결과가 자기 자신과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려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생산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²⁴⁾

윗글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개인의 사회적동기가 개인적동기를 초월하는 이유로서 착취와 억압의 不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인 88년의 로동신문에 실린 글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동기를 강조하는 대신에 정치적 생명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며 자발적 동기 대신에 외부적 자극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북한당국은 국민들의 物的動機를 존중하는 경제운영보다는 政治的動機에 의존하는 수단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회적 목표를 위한 인간개조라는 방법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사람은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도덕적 요구와 물질적 요구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이 두 가지 요구를 어떻게 자극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만큼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발전 과정은 본질상 인간의 발전과정이며 사회발전수준은 결국 인간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인간의 활동이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지만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것도 사람이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

24)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북한경제자료집』 p.189에서 재인용.

는 것도 사람인것만큼 인간개조사업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됩니다.²⁵⁾

이 발표문에서 정치적생명을 강조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인간개조사업까지 강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동기가 계획당국이 당초에 기대한 것만큼 크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물질 동기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북한당국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정한 개인의 동기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계획당국이 설정한 사회적 목표에 적합하게 개인을 개조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북한당국자의 가격 및 시장기구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이들의 발표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상품의 가격을 옳게 정하기 위하여서는 가격을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값이 잘못된 것을 보면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을 비롯하여 일부 경제기관지도 일군들이 지방산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자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가격제정을 틀어쥐지 않고 도인민위원장들에게 맡겨버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계획위원회를 내오고 계획화사업을 알원화한 것처럼 지구가격위원회를 내오고 지방산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가격제정을 일원화하며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가격제정위원회와 같은 경제기관들이 가격제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²⁶⁾

이글을 보면 가격의 배분기능보다는 가격을 통한 통제기능과 가격 일원화를 통한 정치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25)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로동신문》 1988, 9, 9. 『북한경제자료집』 p.326에서 재인용.

26) 앞의 글, 『북한경제자료집』 p.198.

수 있다. 즉 가격의 경제적기능에 대한 인식보다는 정치적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북한은 소규모의 개인단위의 농민시장을 허용하였으며 이를 통한 시장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계획당국의 인식은 시장경제의 이점을 발견하여 활용하려는 노력보다는 예외로서 축소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장이란 말은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생겨난 술어도 아니고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것도 아니며 봉건사회때부터 내려오는 술어입니다. 봉건시대에 수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옛날부터 상인을 장사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장은 봉건사회에서 생겨난 뒤떨어진 상업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원칙적으로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인 농민시장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²⁷⁾

이상에서 본 몇개의 연설문에 나타난 북한지도층의 경제의식은 개인들의 경제적 동기의 존중, 가격의 기능의 이해, 시장가구의 도입을 통한 경제의 분권화 등의 개혁의 기본방향과는 현격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최근의 국제상황과 경제적 여건에 당면하여 앞으로 이들의 경제의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관심의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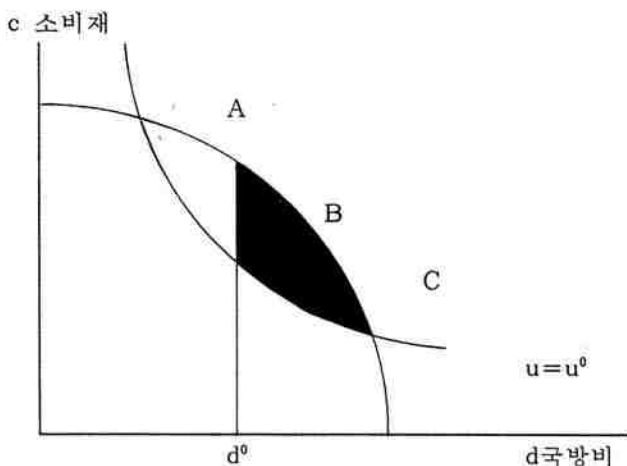
9. 계획당국의 자원배분 결정모형

계획당국의 목적과 이들의 선택에 제약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한다면 이들의 행동은 선택이론적인 모형으로 분석가능할 것이다. 계획당국이 당면하는 문제중에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민간부문과 국방부문의 兩大

27) 앞의 글, 『북한경제자료집』 p.200.

부문간의 자원배분 결정문제를 선택모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먼저 계획당국의 목적부터 설정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북한 계획당국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동기로서 체제 및 집권유지를 가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집권기반은 對內的으로는 국민들의 지지와 對外的으로는 외교나 국방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민간 소비 c 와 국방지출 d 에 대한 국민의 효용을 $u(c, d)$ 라 하고 이 효용은 소비 및 국방에 대해 증가함수이고 한계대체율은 체감하는 모양을 갖는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을 음함수형태로 $f(c, d) \geq 0$ 나타내기로 한다. 끝으로 계획당국의 효용은 민간의 효용수준 u 와 국방 d 의 함수로서 $g(u, d)$ 로 나타내며 이 함수는 민간의 효용과 국방수준에 대해 증가함수이고 한계대체율도 체감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계획당국의 효용을 c, d 를 사용하여 다시 정의하여 $v(c, d) = g(u(c, d), d)$ 로 나타내기로 하자. 그러면 계획당국의 효용함수인 v 도 국민의 효용함수인 u 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즉 계획당국의 효용도 민간소비와 u^0 이상 국방을 d^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계획당국은 이러한 제약하에서 효용이 극대가 되도록 민간 소비와 국방을 선택한다고 하면 계획당국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begin{aligned} \max v(c, d) \quad \text{s.t.} \quad & f(c, d) \geq 0 \\ & u(c, d) \geq u^0 \\ & d \geq d^0 \end{aligned}$$



이 선택문제는 위의 그림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계획당국이 선택가능한 범위는 빗금친 부분이며 이 선택문제의 결과는 계획당국의 선호의 형태에 따라 A, B, C, 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A는 계획당국의 선택에 국민의 효용수준이 제약이 되지 못하고 생산가능경계와 국방의 최저수준만이 제약으로 유효한 경우이다. 이것은 계획당국의 소비재로 나타낸 국방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국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이며 이 때 계획당국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방수준만을 택하고 나머지 자원을 모두 소비재에 배분한다. 이것은 계획당국의 성향이 지극히 온건하거나 또는 국방에 낙관적 전망이 가졌을 경우를 나타낸다.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유형 C이다. C는 계획당국의 선택에 국방의 최저수준이 제약이 되지 못하고 생산가능경계와 국민의 최저생

활수준만이 제약으로 유효한 경우이다. 이것은 계획당국의 소비재로 나타난 국방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국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은 경우이며 이 때 계획당국은 최저생활수준유지에 필요한만큼의 소비재만을 배분하고 나머지 자원을 모두 국방에 투입한다. 이것은 계획당국의 성향이 지극히 강경하거나 또는 국방에 위급한 전망을 가졌을 경우를 나타낸다. 계획당국의 국방에 대한 성향이 양극단의 중간에 있을 경우의 배분이 B이며 이 때에는 생산가능경제만이 제약이 되며 실제로 일어나는 배분은 국방의 한계수준도 아니고 국민생활의 최저수준도 아닌 중간수준으로서 계획당국의 국방에 대한 평가와 실제로 국방의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상태를 이룬다.

이 모형의 外生변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 국민들의 최저효용수준인 u^0 는 다음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정보의 流入은 u^0 를 상승시키며 이러한 정보의 통제는 u^0 를 억제하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이다. 국방의 최저수준인 d^0 는 다음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남한이나 남한의 우방국들이 군사력증강이나 관계강화는 d^0 를 높일 것이며 북한의 우방인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 약화나 이들과의 관계악화는 d^0 를 높일 것이다. d^0 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남한이나 남한의 우방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나 북한의 동맹국들과의 관계강화 노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산가능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차관, 기술의 도입은 생산가능경제를 확장시킨다. 둘째로 북한 국민들의 노력의 증가나 기술의 개발은 생산가능경제를 확장시킨다. 셋째로 효과적인 대외 무역활동이나 효과적인 경제개방이나 개혁은 생산가능경제를 확장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계획당국의 성향은 국민 생활과 국방에 대한 상대적 비중에 의해 결정되며 국방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하든가 국방에 관한 정세를

지극히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국민생활수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국방에 최대한의 자원을 투입하려 할 것이며 그 반대의 성향을 가졌을 경우에는 국방에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려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목적의 수행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던 것이 사실 것이며 대체로 북한의 계획당국의 결정은 시기와 집권층의 성향에 따라 B와 C 유형간의 변화를 보여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경제-기술적인 제약과 국방의 제약과 체제유지를 위한 제약은 주변정세와 계획당국의 경제, 외교적인 노력에 따라 변화하며 이 세 제약을 모두 충족시키는 범위가 계획당국의 선택의 범위이다. 이 범위가 북한 체제의 餘力을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이 여력의 확대 또는 유지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 당면한 현시점의 주변환경은 최저국방수준의 강화와 최저생활수준의 제고를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북한계획당국의 선택의 범위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兩방향의 압박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도는 생산가능경제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며 부차적인 수단들을 동원하여 이 압박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이 경제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남북한의 경제교류나 국제무역에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것은 생산가능경제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국제 상황에 대한 북한주민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것도 기대생활수준의 상승속도를 되도록 억제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 북한당국이 경공업부문의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중공업을 국방재, 경공업을 소비재라고 편의상 보았을 경우 앞의 그림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이 중공업을 최대한으로 강조한 C 유형의 자원배분구조에서 중공업을 줄이고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B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이 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자원배분이 C에서 B로 조정되는 이유로는 개방에 따른 북한주민의 기대생활수준의 상승을 들 수도 있고 계획당국이 군사적인 성향이 온건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들 수도

있다.

앞으로의 남북한의 경제협력이라든가 북한의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는 북한의 생산가능경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선택이 A 점일 경우에는 북한의 생산 가능성확장은 국방수준의 유지와 소비재생산의 증가로 분명히 나타나며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은 최저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국방은 최저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것이 남북한의 건설적인 입장에서의 교류협력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자원배분 결정이 B 유형의 상황이면 북한의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의 국방의 강화를 수반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민의 생활수준은 최저수준을 상회하며 국방도 최저수준을 상회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C 유형의 배분이다. 이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수준은 최저수준이며 국방은 이들의 경제여건이 허용하는 최고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제의 성장은 外生的으로 상승한 주민 생활수준을 최저수준에서 유지시키며 나머지의 자원을 모두 국방에 투입하는 자원배분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여건의 호전은 그 자체로는 A를 제외한 어느 경우에건 국방의 강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에서 남한은 교류의 폭과 속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의 집권당국이 A나 B 유형의 배분을 선호하는 온건하고 생산적인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가져서 북한당국이 이러한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교류의 속도를 경제적 판단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당국이 C 유형의 성격을 고수하고 있다면 교류의 속도는 북한주민의 기대생활수준의 상승속도 이하로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앞선 교류속도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과 주변국들의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지도층의 대남인식의 온건화와 이를 통

한 북한의 경제여건의 호전이 북한의 국민기대수준이 상승하는 속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조절하여야만 북한의 경제여건의 향상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의 개선보다는 북한의 군사력강화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형은 북한당국의 관찰된 행동의 변화가 어떤 요인에 의한 반응인가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C 상태에서 계획당국의 선택이 소비재축소와 국방강화로 변화하였다면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이 경우 원조, 무역 등의 경제사정의 호전에 따른 생산가능경계의 확장뿐이다. C 상태에서 반대로 소비증가와 국방축소로 변화하였다면 그 원인은 기대 생활수준의 상승이나 계획당국의 성향이 온건하게 바뀐 것이다. B 상태에서는 기대 생활수준의 상승은 계획당국의 행동변화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비와 국방의 동시적인 증가는 경제 여건의 호전이 원인이며 소비증가와 국방축소는 계획당국의 성향이 온건해진 것이 원인이 될 것이다.

10. 결 언

북한의 정치 경제운영에 지금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소련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많은 독자적인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또한 이들로 하여금 종전과는 달리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와 산업구조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는가는 결국 북한의 정책당국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이들의 선택은 집권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제약과 마르크스주의적 敎理에서 받은 경제의식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주장과 이로 인한 兩陣營의 이념의 대립에서 우리가 관찰한 현상은 자본주의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내부의 노력

과 변화이었으며 붕괴의 위기를 맞는 것은 도리어 이들의 체제이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체제가 본래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이 구조적 모순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이해나 운영의 지식을 제공하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이른바 생산수단에 의한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경제를 하나의 독자적인 체제로서 운영하는 데에는 기여를 할 수 없었으며 이들의 敎理的 유산은 오히려 경제운용을 제약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모형과 개념은 한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지식으로서는 경제적인 전문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국가 및 이를 시도하였던 제3세계국가들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이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먼저 북한의 정책당국이 마르크스적 思考에서 벗어나 개인들의 경제적 動機의 존중, 가격기능의 이해, 시장기구의 도입을 통한 분권화와 효율성의 이해와 같은 의식전환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국민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형성되어 전체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소련의 역할과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북한의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결정에 이러한 요인들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본고의 견해이다. 그러나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본고에서는 소련이 미친 역할의 몇가지 측면만을 고려하는 데에 그쳤으면 또한 제시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본고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밝히는 자료의 조사와 연구가 북한경제의 분석과 구조적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희정, 『북한 경제입문』 이남현 역, 서울:청년사, 1988.
- 김수용, “북한경제의 발전전략과 성과: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22집, (1991) pp.1-20.
- 김갑철, “북한에서 ‘인민정권’ 수립과정”, 전인영 편집,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36-64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 1992.
- _____,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2.
-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
- 이규열,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1991) pp.127-48.
- 이태욱, “북한 경제의 부문별 현황”, 이태욱 편집,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147-80.
- _____, “자력更生 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110-228.
- 전인영, “주체 사상의 형성 배경과 이론 체제.” 전인영 편집, 『북한의 정치』 을유문화사, 1990, pp.65-101.
- 정갑영,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과 기본 정책 노선”, 이태욱 편집,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90, pp.29-56.
- _____, “북한의 경제발전과 성과-비교”, 『동아연구』 제23집 (1991) pp.99-122.
- 최완규,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정책”,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1991) pp.40-74.
- 통일문제연구소, 『북한경제자료집』 서울: 민족통일, 1989.
- 추재호, “북한의 산업구조”, 정상훈 외 공저,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연구소, 1990, pp.67-96.

허 만, “동구 사회주의의 대변혁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 『통일문제 연구』 제3권 1호 (1991) pp.149-84.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 : 나남, 1992.

Trigubenko, Marina Ye, “Industry of the DPRK : Specific Features of the Industrial policy. Sectoral Structure and prospects”,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개발개발연구원, 1991, pp.101-35.